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국가기술이전센터' 설립 추진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술이전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될(가칭) 「국가기술이전센터(한국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다. 또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및 중개인(기술브로커)에 대한 육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들 기술브로커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장관과 김병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갑수 한국종합기술투자 사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종구 생산기술연구원장 등 산업·연구·금융계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술거래제도 확립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기술이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 센터 내에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기술평가기관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공동출자해 「한국기술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

부는 또 장기적으로 기술평가 및 거래관련 시장이 성숙되면 이들 기관을 민영화해 민간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신용보증기관의 기업·개인에 대한 기술 및 신용평가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자금을 기술투자시장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정부가 「국가기술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우리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기술거래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 저효율제품 행정처분 강화

고효율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해왔으나 7월부터 시정명령조치 없이 곧바로 생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 관련제도가 에너지 소비효율기준·효율표시·등급표시제 등으로 3원화돼 있어 제조 및 판매업자, 소비자 등이 이들 제도를 이해

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하나로 통합,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형광등 제조업체 10개사의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일전구의 형광램프 1개 모델을 적발, 6개월 이내에 효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산업자원부, UPS분야 KS규격 'C4310' 보완 개정 추진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이 관련업계로부터 의견 받아왔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분야의 KS규격을 보완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7일 기술표준원 측은 UPS분야 국가표준규격인 KS C4310이 관련 업계로부터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규격보완 개정 및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측은 6일자 관보를 통해 국제전기협회(IEC) 기준에 맞춘 다양한 UPS형식을 KS C4310 규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KS규격 개정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UPS분야 규격 보완내용은 두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

되는데 기존의 단독 UPS 외에 병렬교류 UPS, 여분 교류 UPS 등의 다양한 제품 규격을 보완·제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또 UPS업체들의 KS심사절차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10여개 UPS업체를 표본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KS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제조공정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표준화일반 △자재관리실태 △공정관리실태 △제품품질관리실태 △제조설비관계 △검사설비관계 등 6개 분야가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KS C4310규격 보완 및 KS심사기준 확정 공고절차를 마치고 UPS업체들의 실질적 KS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국산화자본재 품목등 산업기술개발사업 800억원 지원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제4차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에 800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가 21일 마련한 제4차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등 8개 기관(업종별)에서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취급기관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용자대상은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권 등의 실용화 사업이다.

또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품질을 개선하거나 차별화 한 제품 또는 수입대체품목개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자금지원 조건은 연리 7.0%(3년거치 5년분할상환, 기술담보는 연리 7.5%에 2년거치 3년)이며, 지원 한도액은 기술개발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지다.

선정된 용자사업자는 24개 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에서 현물담보, 기술신용보증 등의 신용보증서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기술개발용자자금이 올해부터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에

따른 신속한 개발지원을 위해 분할 지원되며, 올해 총 지원액은 2,867억원이다.

▲ 용자사업 취급기관

〈자본재시제품분야〉

- 기계철장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금융지원팀,
Tel 369-7824/5
- 전자기기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Tel 553-0941
- 전기기기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기술진흥팀,
Tel 3476-0271/4
- 섬유소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진흥과,
Tel 528-4015/6
- 화학소재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기획과,
Tel 786-2372
-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진흥원 지도관리팀,
Tel 708-2125
- 기타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Tel 828-1942/4

〈첨단기술제품분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총괄팀,
Tel 8298-651/8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Tel 553-0941

중소기업청, 해외인증비용 70% 지원

‘해외인증이 없어 수출을 못하십니까.’

CE(유럽연합 통합인증마크), UL(미국 안전규격)등 해외인증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을 중소기업청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중기청은 인증신청에서부터 획득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줄 컨설팅회사를 소개하고 그 비용도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인증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노려 볼 만하다.

중기청의 해외인증 지원을 받는 건 간단하다. 중소기업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금년의 경우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이때 관련 서류를 갖춰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중기청이 구성한 민간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대학 등에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선정 기준은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우대(5% 가산점)하고 ▲수출유망전략상품 생산업체로 수출과급효과

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기업 순이다.

일단 지원대상으로 뽑히면 상담을 통해 인증신청을 대신해 줄 컨설팅 기관을 정한다. 중기청 산하 민간시험연구원 18개 기관과 98개 민간컨설팅 회사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때부터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중기청은 착수금(총사업비의 50%)의 절반을 컨설팅회사 등 대행기관에 지급한다. 나중에 인증을 획득하면 총 경비의 70%까지 중기청에서 지원한다. 수출업체 입장에선 나머지 30%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중기청에 지원신청을 냈다가 그때 탈락했다라도 신청은 계속 유효하다. 나중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기청은 작년 하반기에만 25억원을 들여 3백80개 업체가 CE, UL, QS-9000 등 12개 분야의 인증을 획득하는 걸 도왔다.

올들어서도 1천6백10개 신청업체중 3백60개사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했다. 추가로 5백개사를 더 뽑아 33억원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